

국민의힘은 '국민의 목소리' 안들리나

내란·김건희 특검법 반대
헌법재판관 임명도 발목잡기
환율·주식 등 경제 위기 심각
'탄핵 장기화' 국민만 피해



“윤석열 체포” 광주의 함성
지난 21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퇴진과 사회대개혁 정취를 위한 7차 광주시민총궐기대회'에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국민의힘이 '12·3 계엄'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처리할 헌법재판관 임명안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엄동설한 거리에서 대통령 파면을 외치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2·3·4면>

국민의힘은 최근 야권 주도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도 권한쟁의심판 카드를 꺼내드는 '탄핵 지연 작전'을 펴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탄핵 리스크'가 장기화하면 극심한 국민 갈등과 경제 악영향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계엄·탄핵 청구서'는 영하의 날씨에 계엄군을 막아내고, 전국 각지 거리에서 탄핵을 외쳤던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며 "경찰, 검찰, 공수처, 사찰특검, 일반특검까지 5개 기관이 수사하면 과열된 수사 경장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데도 재의요구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권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및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 "헌법재판관 임명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해

법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탄핵 가결 과정을 거치면서 전국 곳곳에서 대통령 '탄핵'과 '파면'을 목놓아 외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안중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진운계' (진 윤석열) 의원 등은 12·3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안' 투표에도 참석하지 않은 데다,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회를 포위해 참여하지 못했다"는 궤변을 늘어놓기

도 하면서 국민보다는 여당을 지키고, 주도권을 야당에 뺏기지 않겠다는 정치적 목적만이 당내를 지배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거론하며 정부와 여당을 몰아붙이고 있다.

이처럼 여당이 탄핵안 처리 과정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탄핵안 심의 일정을 전반적으로 미루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탄핵안 처리가 빨라질수록 조기 대선 시기도 앞당겨질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으

로서는 계엄·탄핵 사태가 잠잠해진 뒤 대선을 치르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과 대법원 선고가 탄핵 심의 일정과 겹치면서 국민의힘의 머릿속이 더욱 복잡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선고 결과에 따라 여권이 다시 주도권을 쥌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지연 작전을 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면으로 계속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尹, 탄핵 서류 수취 일주일째 거부...헌재, 오늘 입장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헌재)가 송달하는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일주일째 거부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지난 16일부터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의 방법으로 보내는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각종 서류에 대해 수취를 하지 않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로 보내는 서류는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배달되지 않고 있다. 17일부터 일주일째다.

헌재는 지난 19일 열린 헌재 평의에서 탄핵 서류 수취거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

게 전달하는 '유치·보송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탄핵심판에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윤 대통령측이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문제 제기를 할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송달에 대한 방침을 이르면 23일 밝힐 예정이다.

헌재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일정 변동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꾸려지지 않거나 불출석하는 경우 연기될 가능성도 크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재판 지연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해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측이 "지연전략"을 편다고 판단, 이를 차단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설정했다. 소추단은 '확실한 증거'로 대응해 내년 2월 안에 탄핵 인용을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번주 '동장군' 맹위 '칼바람' 불어 더 춥다 눈 없어 '화이트 크리스마스' 난망

광주·전남지역에서 '동장군' (冬將軍)이 맹위를 떨칠 전망이다. 이번주 내내 영하권의 최저기온을 보이면서 낮에도 바람이 많이 불어 체감온도까지 영하권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 크리스마스를 앞둔 24일과 25일 눈 소식이 없어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기대하기 어렵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확장으로 따라 당분간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최저 영하4~2도·최고 7~10도)보다 낮은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다"고 22일 예보했다.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5~2도·낮 최고기온은 7~10도에 분포하겠다. 24일 최저기온은 영하4도·최고기온은 10도, 25일 최저기온 영하4도·최고기온 11도를 보이며 크리스마스까지 영하권 강추위 이어지겠다.

시베리아 대륙 고기압의 확장으로 따라 중국 북부 지방에 이동성 고기압이 형성돼 중국발 찬공기가 밀려 들어 온다는 것이 기상청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광주·전남 지역 하늘은 흐리거나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은 금요일인 27일까지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관측했다. 기상청은 주기적인 기압골의 통과와 대륙고기압의 확장으로 토요일인 28일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아침 기온이 낮고 바람도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장해원 기자 hey1@kwangju.co.kr

올해의 이슈 - 5·18조사위 보고서 부실 ▶6면

FA 임기영, KIA서 3년 더 뛴다 ▶18면



꿈꾸는 신중년 - 연 공예가 박준기씨 ▶22면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THE NEW GENERATION
윤조에센스 6세대

Sulwhasoo